

일제 총동원체제기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설립과 군사원호체제

김선호*

〈차 례〉

- 머리말
-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설립과 군사원호사업의 통합
-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조직·간부 구성과 동원의 구조
-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조선군사후원연맹의 해체
-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군사후원연맹은 1937년 7월 24일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군사원호활동에 동원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원호단체였으며 핵심사업은 일본군 원호사상의 보급과 군인·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이었다. 군사후원연맹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제국군인후원회와 제국제향군인회가 여기에 통합됨에 따라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에서 전개된 군사원호활동의 경험이 군사후원연맹으로 계승되었다. 군사후원연맹은 조선총독부 내무국이 운영하고 조선군사령부가 협조하는 관군(官軍)합동단체였으며 조선총독부의 중앙·지방 행정계통에 따라 운영되었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은 1937년 7월부터 1939년 3월까지 각 도에 13개 지부와 각 부·군·섬에 225개 분회를 결성했다. 또한 연맹은 각종 사회단체를 가맹시켰는데 1938년 1월 2일 당시 중앙본부와 지방지부에 가맹한 단체는 2,500여 개에 달했다. 조선총독부는 연맹의 지방지부를 중앙본부·사회단체와 종적·횡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조선인을 총력전체제에 결박시킴과 동시에 이들의 반일운동을 차단했다. 일제는 1938년 7월부터 한반도를 장기전의 후방기지로 만들었으며 12월 1일 군인원호회 조선지부를 설립해서 군사원호활동의 중심기관으로 삼았다. 이후 군사후원연맹은 2년 6개월 동안 활동을 유지하다가 1941년 7월 31일에 군인원호회로 최종 통합되었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제어] 제국군인후원회, 제국재향군인회, 은사재단 군인원호회,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중일전쟁, 조선군사령부

1. 머리말

근대에 들어와 전쟁은 군인들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국민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37년 이후 일제는 중일전쟁(中日戰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에서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총동원체제는 근대 이후 전쟁의 새로운 양상인 총력전(總力戰, Total War) 개념에서 나온 동원체제이다. 총력전은 전선과 후방의 구별이 약해지고 국가가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동원구조에 포섭되어 국가권력에 동원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전쟁은 단순한 무력전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문화 등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격렬하고 장기간에 걸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한 국민 전체가 전쟁의 주체가 되었고 국민의 정치적·사상적 단결력과 국가의 경제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로써 전쟁은 국가총력전이라 부르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¹⁾

총력전과 고전적 전쟁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한 국가의 안보체제 내에서 그 사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변화한 것이다. 고전적 전쟁이 단지 동원된 군대 간의 전쟁이었다면 총력전은 동원된 전체 사회들 간에 수행된 전쟁이었다. 근대의 산업화를 통해 전방과 후방은 동일한 기술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철도와 전신(電信)의 등장은 전방과 후방을 더욱 공고히 연결했다. 즉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는 군대와 사회 전체를 전쟁이라는 하나의 과업으로 묶었으며 이와 동시에 각 국의 전쟁수행능력을 극도로 팽창시켰다.²⁾ 총력전이

1)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 저, 서영식 역, 『日本軍隊史』上, 제이앤씨, 2013, 209쪽.

기존 전쟁과 다른 점은 인적·물적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는 전쟁형태이며 총력전의 과정에서 전후 사회의 근본적 속성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³⁾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은 1937년부터 본격화된 총동원체제 하에서 일제가 조선인들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설립한 전시동원단체 중 하나였다. 총동원체제시기 조선에 설립된 최대의 전시동원단체는 1938년 6월에 설립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이하 정동연맹)이었고 연맹은 1940년 10월에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이하 총력연맹)으로 개편되었다. 이 두 개 단체는 1938년부터 1945년 일제 패망 때까지 조선에서 전시동원을 주도했다. 이 같은 성격으로 인해 기존의 총동원체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동연맹과 총력연맹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군사후원연맹은 정동연맹의 가맹단체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⁴⁾ 기존에 조선군사후원연맹이 독립된 주체로 주목받지 못한 것은 1938년 6월에 정동연맹의 하부단체로 흡수되면서 독자적인 군사원호활동(軍事援護活動)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구경향 속에서 조선군사후원연맹을 직접 다룬 연구성과가 제출되었다. 우치다 준(内田じゅん)은 총동원체제 하에서 재조선 일본인들의 '내선일체(內鮮一體)'정책에 대한 태도와 역할을 연구했다. 그는 조선군사후원연맹이 진행한 전선위문사업과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조선본부의 군사원호활동을 분석했지만 주로 정동연맹과 녹기연맹(綠旗聯盟)에 초

2) 이정하, 「미하일 프룬제의 군사사상과 총력전 구상」, 『서양사연구』 27, 한국서양사연구회, 2001, 125쪽.

3) 山之内靖, ヱイクター コシユマン, 成田龍一 共編, 『總力戰と現代化』, 柏書房, 1995, 310~321쪽.

4) 최유리, 「일제 말기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윤선자, 「일제전시하 총동원체제와 조선천주교회」, 『역사학보』 157, 역사학회, 1998; 김영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실시와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김영희,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사무국 개편과 관변단체에 대한 통제」, 『한국근현대사연구』 3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김광규, 「일제말 '조선연맹'의 부녀강제동원 시책과 선동」, 서울대 사회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7;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독립기념관, 2009; 우치다 준 저, 한승동 역, 『제국의 브로커들』, 길, 2020; 황선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전시동원 활동」,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점을 두었다.⁵⁾ 이승현은 조선총독부의 군사원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군사후원연맹과 은사재단 군인원호회(恩賜財團 軍人援護會) 조선본부의 설립과 원호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이 주제의 연구기반을 마련했다.⁶⁾

선행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사후원연맹은 아직까지 해명해야 할 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연맹의 조직구성·간부구성과 군사원호활동이 중앙·지역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다. 또한 조선군사후원연맹과 다른 군사원호단체·동원단체의 상호관계도 해명해야 할 과제이다. 군사후원연맹은 1910년 한일병합 이래 조선에 독자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군사원호단체였으며, 이후 은사재단 군인원호회·정동연맹·총력연맹이 전개한 군사원호활동도 대부분 조선군사후원연맹의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조선군사후원연맹에 대한 연구는 총동원체제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조선에 구축된 총동원체제 중 대중적 군사원호활동의 내부적 기원을 밝히는 것이다. 군사원호활동은 한일병합 이후부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군사후원연맹이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군사후원연맹과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동원단체·원호단체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이 단체들이 총동원체제를 형성하는데 서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선군사후원연맹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제 군사원호체계의 일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설립과정을 통해 조선에서 진행된 군사원호활동의 기원을 살펴보고, 연맹의 조직·간부·활동을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일제가 조선에 구축한 동원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전시동원단체 중 정동연맹은 『총동원』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지만 조선군사후원연맹

5) 우치다 준, 「총력전시기 재조선 일본인의 '내선일체'정책에 대한 협력」, 『아세아연구』 51(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14~52쪽.

6) 이승현, 「총동원체제하 조선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군사원호 실태」, 동서대 일본지역연구과 석사학위논문, 2023.

은 기관지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사후원연맹과 관련된 자료는 일제시기에 생산된 신문과 책자에 흩어져 있다. 이 글은 이상의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 주로 신문자료와 조선군사후원연맹에서 발간한 자료를 활용했다.⁷⁾

2.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설립과 군사원호사업의 통합

제1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총력전 개념은 일본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 육군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 아래 병기(兵器)·장비·전법(戰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내외적 상황은 서구와 달랐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군국주의로 치닫던 일본은 제1차 대전 이후 수년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군국주의(軍國主義)가 힘을 잃었다. 그 이유는 제1차 대전 이후 세계의 반전평화 풍조의 영향과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성과 때문이었다. 일본 국내외에서는 군비 축소와 군부의 정치적 특권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1922년 제45차 제국의회는 「군축건의안」을 가결했고 정당들은 앞다투어 군축과 군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메이지유신 이래 ‘천황제국가’ 하에서 배양되어 러일전쟁(露日戰爭) 이후 군부의 정치적 지위와 가족주의적 국가관 확립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본의 군국주의는 여기서 분해의 위기에 처했다.⁸⁾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는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 이후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일본 육군성은 1936년 3월부터 히로타(廣田) 내각에 전쟁준비와 군비증강을 골자로 하는 ‘광의국방(廣義國防)’과 ‘서정일신(庶政一新)’을 요구했다.⁹⁾ 히로타 내각은 그해 2월 청년장교들이 일으킨 2·26사건을 계기로 육군이 요구하는 전쟁준비와 군비증강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

7) 이 글은 여러 신문 중에 민간과 관변의 시각이 담겨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를 주로 활용했다.

8) 후지와라 아키라, 앞의 책, 212~213쪽.

9) 「聲明を基礎로한 各省의 方針內容」, 『동아일보』, 1936년 3월 19일.

리고 내각은 1936년 8월 7일에 「국책의 기준(國策の基準)」을 결정하면서 개전을 추구하는 강경노선으로 전환했다. 「국책의 기준」은 육군·해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 대륙의 기반 확립과 남방해양 진출을 국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군비를 확장한다는 방침을 성문화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6월 8일에는 「제국국방방침(帝國國防方針)」을 전면 개정했다. 새 방침은 가상적국(假像敵國)으로 미국·소련을 제1순위로 두고 그 다음으로 중국·영국을 추가한 것이다. 「제국국방방침」에 따라 육군은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 50개 사단의 병력을 확보하려고 계획했고 해군도 전함 12척, 항공모함 12척 등의 전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육군은 이 소요병력을 실현하기 위해 ‘육군군비증강계획’을 결정했고 해군도 즉시 ‘제3차 보충계획’을 결정했다. 이로써 만주사변 이후 최초로 군비확장이 본격화되었다.¹⁰⁾

이후 일본 군부는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을 빌미로 중일전쟁을 개시했다. 고노에(近衛) 내각은 7월 11일에 각의에서 화북(華北) 파병을 결정했고 당일 관동군(關東軍) 2개 혼성여단과 조선군(朝鮮軍) 제 20사단에 파견 명령을 하달했다. 7월 15일에는 육군 항공병력의 절반 이상을 집결시킨 임시항공병단(臨時航空兵團)의 편성과 파견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은 모두 일왕(日王)의 재가를 받은 봉칙명령(奉勅命令)이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7월 11일에 노구교사건을 ‘북지사변(北支事變)’이라 명명하고 전쟁 돌입의사를 표명했다. 만주사변 때와 달리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의 확대에 깊이 개입했다. 중일전쟁은 만주사변과 규모·내용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본격적인 전쟁이었다. 또한 그때까지 일본이 경험한 최대의 전쟁인 러일전쟁을 훨씬 능가했다.¹¹⁾ 게다가 이 전쟁은 일왕의 재가 아래 내각이 찬동하고 군부가 주도한 전면전이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본토에서는 일본군을 지원하고 후방을 원호하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무기를 헌납하고 국방헌금을 헌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이 확대되고

10) 후지와라 아키라, 앞의 책, 276~277쪽.

11) 후지와라 아키라, 앞의 책, 282~283; 297쪽.

장기화될 것을 예상했고 후방기지로서 조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관계당국·각종단체와 제휴해 강력한 조직과 통제 아래 후방활동을 일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원호단체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가 바로 조선군사후원연맹(이하 군사후원연맹)이다.¹²⁾

군사후원연맹은 1937년 7월 24일에 조선총독부 제2회의실에서 발회식을 거행하고 활동을 개시했다. 연맹은 선서를 통해 “각하(刻下) 비상시국에 직면하여 조선군사후원연맹은 더욱이 애국의 열의를 앙양하여 결속제휴(結束提携)하며 힘을 총후(銃後)의 임(任)에 봉사하며, 황군(皇軍)의 지기(志氣)를 고무진작하여 후고(後顧)의 근심이 없이 그 본분을 다하게 할 것을 서약하기로 선언”했다.¹³⁾ 군사후원연맹이 결성된 시점은 7월 7일 중일 전쟁이 발발한지 바로 2주 뒤였다. 연맹은 애국심을 고취하고 후방기지의 임무를 수행하며 일본군의 사기를 고무시켜 전장의 병사들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결성되었다.

조선총독부가 군사후원연맹을 새로 설립한 것은 1937년에 일본에서 개정된 「군사부조법(軍事扶助法)」과 관련 있다. 일본 의회는 1917년 “병역출정(兵役出征), 전병사상(戰病死傷) 등 군사회생과 차(此)로부터 파생하는 가족·유족의 불행”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구호법(軍事救護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29년에는 ‘병역의무자 및 폐병(廢兵)대우심의회’를 신설했다. 그러나 심의회가 요청한 사항 가운데 1937년까지 실행된 사항은 일부분에 불과했고, 「군사구호법」의 운용도 만주사변과 상해사변(上海事變)을 거치면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의회는 1937년 봄에 「군사구호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군사부조법」으로 개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부조법」은 응소군인(應召軍人)에 대해 충분한 군사원호를 제공하지 못했다.¹⁴⁾

일본 본토에서 개정된 「군사부조법」은 1937년 7월 28일부터 조선에서도

12) 朝鮮軍事後援聯盟, 『朝鮮軍事後援聯盟事業要覽』, 谷岡商店印刷所, 1939. 4. 15, 3쪽.

13) 「朝鮮軍事後援聯盟 規約, 宣言 등을 決定」, 『동아일보』, 1937년 7월 25일.

14) 「後顧의 憂가 없도록」, 『동아일보』, 1937년 8월 11일.

시행되었다. 군사부조 신청자에 대한 취급업무는 부윤(府尹)과 군수(郡守)가 담당했고 이를 도지사(道知事)가 취합했다.¹⁵⁾ 「군사부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선총독부 내무국은 8월 30일 군사부조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도 군사부조사무담당자회의’를 개최했다. 내무국은 이 회의에서 입영·응소·출동(入營·應召·出動)군인의 가정상황 조사, 군사부조사상의 보급 철저, 「군사부조법」에 의한 부조, 군사후원단체 등에 의한 부조, 입영·응소·출동군인과 그 가족·유가족의 직업 알선, 군사후원연맹에 대한 사항을 협의했다.¹⁶⁾ 이 회의는 조선에서 「군사부조법」과 「입영자 직업보장법」 등 군사원호와 관련된 법령을 시행하고 각종 군사후원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내무국장은 군사후원연맹의 결성 목적에 대해 「군사부조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민간단체가 제휴해 조선군사후원연맹과 지방연맹을 결성했고 연맹의 통제 아래 군사원호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했다.¹⁷⁾

결성과정을 보면 군사후원연맹의 설립을 주도한 주체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였다. 연맹은 총독부가 만든 “군·관·민 일치의 대규모의 군사후원단체”였다. 군사후원연맹의 회장은 조선총독부의 오노 로쿠이치로(大野隼一郎) 정무총감이었고 부회장은 오다케 슈로(大竹十郎) 총독부 내무국장과 가맹단체 대표자 중 1명이 맡았다. 평의원은 각 가맹단체의 대표자가 맡았고 간사는 야규 시게오(柳生繁雄) 총독부 사회과장과 기타 1명이 있었다. 연맹의 고문은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 총독,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조선군 사령관이었으며 상담역(相談役)은 쿠노 세이이치(久納誠一) 조선군 참모장이었다.¹⁸⁾ 군사후원연맹의 사무실도 조선총독부 사회과 안에 설치되었다.¹⁹⁾

즉 군사후원연맹은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정무총감-내무국

15) 「軍事扶助法施行細則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제3191호), 1937. 7. 28.

16) 「各道軍事扶助 事務擔任會議」, 『동아일보』, 1937년 8월 31일.

17) 「軍事扶助事務 擔任者協議會」, 『동아일보』, 1937년 8월 31일.

18) 「朝鮮軍事援護聯盟 卅餘加盟團體로 組織」, 『동아일보』, 1937년 7월 22일.

19) 「朝鮮軍事聯盟에 獻金三萬六千圓」, 『동아일보』, 1937년 8월 28일.

장·사회과장으로 이어지는 조선총독부의 행정계통에 따라 운영되었다. 특히 연맹의 실질적인 운영은 총독부 내무국이 주관했다. 주목할 점은 연맹의 간부로 조선군 사령관과 참모장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사후원연맹은 조선총독부 내무국이 운영하고 조선군사령부가 협조하는 관군(官軍) 합동단체였다. 연맹의 관군합동적 성격은 설립 직후부터 나타났다. 군사후원연맹의 부회장 오다케 내무국장은 연맹을 결성한 직후 조선군 제20사단 사단장 가와기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에게 연맹결성의 취지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가와기시 부대장은 총독부에 '황군(皇軍)'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는 답신을 보냈다.²⁰⁾

중앙본부와 동일하게 지방에 설치된 지부와 분회의 운영도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했다. 경성군사후원연맹의 회장은 경성부윤이 맡았고 연맹의 사무소는 경성부 총무부 내무과에 설치되었다.²¹⁾ 경성군사후원연맹의 「사무분장규정」에 따르면 연맹의 모든 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경성부의 내무과장, 사회과장, 서무과장, 위생과장, 권업과장, 영선과장, 회계과장이 주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²²⁾ 결국 군사후원연맹은 조선총독부가 조직하고 총독부 내무국과 지방행정기관이 운영한 관변단체였다.

군사후원연맹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 일반국민에 대한 황군원호사상의 보급 철저, ② 상이군인 및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부조(扶助), ③ 응소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직업 알선, ④ 응소, 출동 또는 개전(凱旋) 군인에 대한 송영(送迎) 및 접대, ⑤ 파견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⑥ 전병(戰病)·사상(死傷) 군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조·위문(弔·慰問), ⑦ 기타 필요한 사업이었다.²³⁾ 연맹은 이상의 사업과 함께 사업 실시를 위한 금품모집을 주요사업으로 결정했다.²⁴⁾

군사후원연맹이 결성되자 일본 왕실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1937년 7월

20) 「各界團體의 活動을 希望」, 『매일신보』, 1937년 7월 28일.

21) 「市內七十團體結合 京城軍事後援聯盟結成」, 『동아일보』, 1937년 7월 31일.

22) 「軍事後援聯盟 事務分掌規程」, 『동아일보』, 1937년 8월 3일.

23) 朝鮮軍事後援聯盟, 앞의 책, 4쪽.

24) 「朝鮮軍事後援聯盟 卅餘加盟團體로 組織」, 『동아일보』, 1937년 7월 22일.

7일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 왕후는 9월 21일 “출정 및 응소군인 유족과 가족”을 위해 어가(御歌)를 내림과 동시에 조선에서 총후(銃後)의 원호사업을 위해 내탕금(內帑金)을 하사했다. 그러자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 총독은 내탕금을 중일전쟁에 출정·응소한 군인의 유족·가족을 원호하는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 원호자금은 바로 조선군사후원연맹에 보내져 집행되었다. 또한 왕후는 11월 30일 중일전쟁에서 전사·순직한 장교와 경찰관에 대해 과자(菓子)와 어가(御歌)를 하사했다. 그러자 조선총독은 군사후원연맹에 왕실의 뜻을 알리는데 철저히 노력하라고 지시했다.²⁵⁾

군사후원연맹의 핵심사업은 일본군 원호사상의 보급과 군인·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이었다. 그런데 군사후원연맹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이미 조선에는 일본군 원호사상을 보급하는 활동과 군인·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이 전개되고 있었다. 먼저 조선에서 가장 먼저 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펼친 단체는 제국재향군인회(帝國在郷軍人會)였다. 제국재향군인회는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군부가 군대의 정신과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조직한 군부의 외곽단체였다. 재향군인회는 “군대와 국민을 결합하는 가장 좋은 연결고리”로서 1910년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임무는 소집이나 동원 등의 기술적인 필요성보다 오로지 국민교화, 즉 군인정신을 국민들에게 확대하기 위한 매개자로 규정되었다.²⁶⁾

제국재향군인회는 일본인 제대군인들의 단체였으며 조선지부는 1911년에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각 지역의 분회장은 예비역 장교들이 맡았다.²⁷⁾ 조선지부는 1912년 8월 당시 전국에 13개 지회가 결성되어 있었다.²⁸⁾ 제국재향군인회는 설립 이후 출정·개전 군인들에 대한 환영사업과 위령사업을 전개했다. 예를 들어 1915년 2월 12일 평양재향군인회는 ‘청도(靑島)출정·개전군인환영회’를 개최했고, 진주재향군인회는 2월 11일 ‘청도(靑島)출정·개전군인’ 7명에 대한 환영회를 주관했다.²⁹⁾

25) 朝鮮軍事後援聯盟, 앞의 책, 2쪽.

26) 후지와라 아키라, 앞의 책, 88쪽.

27) 「統營在郷軍人會 會長原田少尉의 功勞表彰」, 『매일신보』, 1926년 9월 26일.

28) 「大葬과 軍人會」, 『매일신보』, 1912년 8월 22일.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이후 제국재향군인회는 다른 단체보다 앞서 국방헌금 헌납운동과 전몰군인 위령사업을 전개했다. 가령 1933년 3월 경기도 포천군 재향군인회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원마다 매달 5원의 국방헌금을 모금하고 지방 유지들에게도 헌금납부를 알선하기로 결정했다.³⁰⁾ 또한 제국재향군인회 경성연합회는 1933년 9월 만주사변 2주년을 기념해서 제국군인후원회·애국부인회·경성국방의회·연합청년단과 공동으로 '만주사변전몰자 위령제'를 주최했다.³¹⁾ 위령제는 각 지역에서도 개최되었는데 1935년 9월 18일 전주·남해·청주 재향군인회는 만주사변 4주년 기념일에 지역의 국방의회·읍사무소와 공동으로 '만주사변전몰용사 위령제'를 개최했다.³²⁾

한편 군사후원연맹이 결성되기 이전에 조선에서 연맹과 가장 흡사한 군사원호사업을 전개한 단체는 제국군인후원회(帝國軍人後援會)였다. 제국군인후원회는 일본에 본부를 둔 군인후원단체였다. 제국군인후원회 일본 본부의 총재는 일본 왕족인 후미시 노미야(伏見宮)의 사다나루 친왕(貞愛親王)이었고 회장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백작이 맡았다.³³⁾ 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회는 1916년 4월 11일에 결성되었다. 조선지회 총재는 조선총독부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정무총감이 추대되었고, 부총재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장 우사미 가츠오(宇佐美勝夫)와 경무총장 다치바나 고이치로(立花小一郎) 육군 중장이 맡았다. 조선지회 주간(主幹)은 고바야시(小林) 포병 대좌가 맡아 사무를 총괄했다. 조선지회는 즉시 각 지역에 분회를 설치하고 분회 간부를 축탁했다.³⁴⁾ 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회의 평의원은 1916년 1월에 일본본부의 총재가 직접 21명을 축탁했다. 평의원 가

29) 「出征軍人歡迎(平壤·晉州)」, 『매일신보』, 1915년 2월 16일.

30) 「毎月各人五錢式 國防獻金據出 在郷軍人會에서 率先施行 抱川國防義會組織」, 『매일신보』, 1933년 3월 25일.

31) 「滿洲事變의 戰歿者 慰靈祭」, 『매일신보』, 1933년 9월 15일.

32) 「全州의 慰靈祭」·「南海서도 慰靈祭」·「淸州서도 慰靈祭」, 『매일신보』, 1935년 9월 21일.

33) 「軍人後援會 發會式」, 『매일신보』, 1916년 4월 11일.

34) 「軍人後援會 朝鮮支會」, 『매일신보』, 1915년 9월 18일; 「盛大한 後援會 發會式」, 『매일신보』, 1916년 4월 12일.

운데 조선인은 이완용(李完用), 조중응(趙重應), 송병준(宋秉駿) 등 3명이었다.³⁵⁾

제국군인후원회의 각 부회(部會)는 도에, 분회(分會)는 부·군·섬에 조직되었다. 각 부회·분회의 간부는 지방행정기관·헌병대·경찰서의 간부들이 맡았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부회 고양군인후원회의 회장은 군수였고 2명의 부회장 중 한명은 군청 참사(參事)가 맡았다. 3명의 고문 중 2명은 헌병분대장과 고양경찰서장이었다.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 참사와 헌병경찰관이 맡았고 12명의 위원은 모두 면장이었다.³⁶⁾

제국군인후원회 간부에 주로 헌병대와 경찰서의 간부가 임명된 것은 조선 지회 부회장을 맡은 다치바나 고이치로(立花小一郎)와 관련 있다. 다치바나는 1914년 4월부터 조선총독부 경무총장과 조선주차헌병대 사령관을 겸임했다. 당시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조선 총독은 헌병의 강제력을 바탕으로 무단통치를 펼치고 있었다. 헌병에게는 군사경찰·행정·사법 등 모든 분야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도 장관은 헌병인 도 경무부장의 협력 없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³⁷⁾ 즉 제국군인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체는 정무총감-내무부장-군수-면장으로 이어지는 지방행정계통, 정무총감-경무총장-경찰서장-지서장으로 이어지는 경찰계통, 조선헌병사령관-헌병대장-헌병분대장으로 이어지는 헌병계통이었다. 이 가운데 제국군인후원회 운영의 핵심주체는 헌병계통이었다.

제국군인후원회의 결성 목적은 각 지역의 재향군인 중에서 전쟁에 소집된 군인을 후원하는 것이었다.³⁸⁾ 즉 제국군인들을 후원해 이들의 “후고(後顧)”를 없애는 것이었다. 군인후원회의 후원대상은 전사·상병(戰死·傷病)군인의 유족과 현역·응소군인의 가족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 공무 중 상질(傷疾)·상병을 당해 불구폐인이 된 군인과 그 가족으로 생활이 곤란

35) 「後援會 評議員 囑託」, 『매일신보』, 1915년 1월 23일.

36) 「高陽의 軍人後援」, 『매일신보』, 1914년 9월 16일.

37) 이형식, 「朝鮮憲兵司令官 立花小一郎과 ‘무단통치’」, 『민족문화연구』 5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267~269쪽.

38) 「高陽의 軍人後援」, 『매일신보』, 1914년 9월 16일.

한 자, 천재지변으로 재위(災危)에 당해 생활이 곤란한 군인이었다. 군인후원회의 또 다른 결성 목적은 군사사상을 장려·보급해 국민 개병(皆兵)의 시대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³⁹⁾ 군인후원회의 사업내용은 군사후원연맹의 사업내용과 흡사하다.

제국군인후원회는 결성 이후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위문사업과 기부사업을 전개했다. 제국군인후원회 강원도부회(部會)의 경우 1932년 9월 18일 만주사변 1주년을 맞이해 “재만군인 및 국경경비 경찰관에 대한 위문금 모집”을 위한 강연회를 주최했다. 강원도부회는 이 강연회를 통해 위문금 455원 95전을 모금해 관동군·조선부대·국경경비부대에 헌납했다.⁴⁰⁾

군사후원연맹과 제국군인후원회는 비슷한 군사원호활동을 펼쳤지만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단체의 운영계통이 달랐다. 군사후원연맹은 정무총감·내무국장·사회과장·부윤·군수·각 과장으로 연결되는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계통에 따라 운영되었다. 조선군사령부는 군사후원연맹의 고문과 상담역을 맡았고 헌병은 운영계통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비해 제국군인후원회는 지방행정계통, 경찰계통, 헌병계통에 따라 운영되었고 핵심주체는 헌병이었다. 두 단체의 운영계통이 달라진 것은 군대 중심의 전시체제에서 사회와 군대가 결합된 총력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쟁수행에서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계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었다.

둘째, 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회가 제국군인후원회 일본본부의 지부였던 반면에 군사후원연맹은 조선에 독자적으로 조직된 군사원호단체였다. 즉 군인후원회가 일본본부의 방책과 지침대로 운영되었다면 군사후원연맹은 조선총독부의 방책과 지침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이것은 제국일본이 조선총독부의 독자적인 군사원호사업을 인정한 결과였다.

조선총독부가 1937년 7월 시점에 군사후원연맹을 새로 결성한 것은 7월 7일 시작된 중일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했고 후방기지로서 조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관계당국·각종단체

39) 「軍人後援會 發會式」, 『매일신보』, 1916년 4월 11일.

40) 「警官에 慰問金 演藝會益金으로」, 『매일신보』, 1932년 12월 14일.

와 제휴해 강력한 조직과 통제 아래 조선에서 후방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원호단체를 신설한 것이다.⁴¹⁾ 군사후원연맹이 신설된 이후에 제국재향군인회와 제국군인후원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모두 군사후원연맹에 가입했으며 그 이후부터 군사후원연맹의 지도 아래 하부단체로 활동했다.⁴²⁾ 이로써 조선에 만들어진 군사원호단체는 모두 군사후원연맹으로 통합되었다.

3.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조직·간부 구성과 동원의 구조

군사후원연맹은 중앙본부 창설 이후부터 각 지역에 지방지부를 결성했고 여기에 각종 사회단체를 가맹시켰다. 연맹의 조직적 특징은 지방지부와 가맹단체를 동시에 보유한 중층적 조직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군사후원연맹에 가맹한 단체는 제국군인후원회 조선본부,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일본적십자 독지(篤志)간호부인회 조선본부, 대일본국방부인회 경성연합분회, 제국재향군인회 용산연합지부, 해군협회, 국방의회(國防義會), 방호단(防護團), 경성연합청년단, 조선사회사업협회, 조선교화(敎化)단체연합회, 수양단(修養團) 조선연합회, 조선신직회(神職會) 불교각종연합회, 조선불교중앙교무원, 경성기독교청년회,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구세군 조선본영, 경성의사회, 조선연합치과의사회, 경성약제사회, 한성의사회, 고려약제사회 등 22개 사회단체였다.⁴³⁾

군사후원연맹의 가맹단체는 제국군인후원회·제국재향군인회·해군협회 등 군사원호단체, 일본적십자사·한성의사회·고려약제사회 등 의료단체, 조선불교중앙교무원·구세군조선본영 등 종교단체, 경성연합청년단·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등 청년단체, 국방의회·방호단 등 방위단체, 조

41) 朝鮮軍事後援聯盟, 앞의 책, 3쪽.

42) 「朝鮮軍事後援聯盟 卅餘加盟團體로 組織」, 『동아일보』, 1937년 7월 22일.

43) 「統後の 支援을 爲하야 皇軍後援聯盟誕生」, 『매일신보』, 1937년 7월 25일.

선교화단체연합회 등 사회교화단체, 수양단조선연합회 등 사회정화단체, 각종 부인회였다. 조선총독부가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가맹시킨 것은 연맹이 군사원호사업을 전개할 때 인력과 자금을 동원할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국군인후원회와 제국제향군인회를 가맹시킨 것은 이 단체가 이미 군사후원연맹 창설 이전부터 군사원호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국군인후원회와 제국제향군인회가 가맹함에 따라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에서 전개된 군사원호활동의 전통과 경험이 군사후원연맹으로 계승되었다.

군사후원연맹 간부구성의 특징은 이들이 당시 조선에서 각종 사회단체의 간부를 겸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군사후원연맹 회장인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정무총감은 당시 제국군인후원회 조선본부 본부장,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본부장, 해군협회 조선본부 본부장, 조선교화단체연합회 회장, 조선사회사업협회 총재 등 4개 사회단체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었다. 또한 오노 정무총감은 1938년 8월에 군사보조단체인 조선방공(防共)협회가 결성되자 총재를 맡았다.⁴⁴⁾

정무총감의 부인인 오노 테루코(大野照子)도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와 일본적십자 독지간호부인회 조선본부에서 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또한 경성군사후원연맹 회장인 경성부윤 사에키 아키라(佐伯顯)는 경성방호단 단장이었고 그의 부인은 대일본국방부인회 경성연합분회 분회장이었다. 이들 외에 군사후원연맹 가맹단체의 일본인 단체장들은 경성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유력자들이었다. 경성국방의회 의장 아리가 미츠토요(有賀光豊)는 재조선 경제계의 유력자였고, 경성연합청년단 단장 마에다 노보루(前田昇)는 예비역 육군 소장으로 경성에서 동민회와 청년단 임원 등으로 활동한 일본인 유지였다. 수양단 조선연합회 회장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는 1938년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마에다 노보루, 가다 나오지와 함께 이사로 선출되었다.⁴⁵⁾ 경성기독교청년회 회장 가사야 야스타

44)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247; 271; 319쪽.

45) 우치다 준, 앞의 논문, 18; 21; 35쪽.

로(笠谷保太郎)은 기독교 신자이자 재력가로 1938년 5월에 창설된 조선기독교연합회에서 재무위원으로 선출된 인물이다.⁴⁶⁾

그 밖의 가맹단체 단체장은 경성에서 활동한 일본인·조선인 유력자 가운데 의사·치과의사·약제사로 근무하던 전문직 인사들과 구자옥(具滋玉)·황금봉(黃金峯) 등 종교계의 조선인 지도자들이었다. 이처럼 군사후원연맹의 간부들은 각종 군사원호단체·의료단체·교화단체·사회사업단체·방공단체의 단체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맹단체의 조선인·일본인 단체장들은 당시 경성에서 활약하던 재계·종교계·청년단체·전문직의 유력자들이었다. 중앙본부뿐만 아니라 지방지부의 간부들도 각종 사회단체의 단체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함북 회령군사후원연맹 부회장 이와무라(岩村長市)는 제국재향군인회 회령분회 회원회장, 육군특별지원병후원회장, 회령경방단장을 겸임했다.⁴⁷⁾

한편 군사후원연맹은 전국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연맹은 결성식에서 이미 각 도에 지부를, 부·군·도(府·郡·島)에 분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⁴⁸⁾ 이에 따라 각 도에는 지부가 설치되었고 부·군·도에는 분회가 설치되었다. 분회의 명칭은 ‘지역명+연맹’으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제천군에 조직된 분회는 “조선군사후원연맹 충청북도제천군연맹”으로 명명되었다.⁴⁹⁾ 그러나 지부와 분회의 실제 명칭은 규약과 달랐다. 지부의 일반적 명칭은 “도(道)군사후원연맹”, 분회의 일반적 명칭은 “부·군·도(府·郡·島)군사후원연맹”과 “군사후원연맹 부·군·도분회”로 명명되었다. 또한 군사후원연맹 내부에서 연맹과 가맹단체·하부조직 간의 업무관계는 각각 달랐다. 군사후원연맹과 가맹단체는 횡적으로 연결되었고 연맹과 지부·분회는 종적으로 연결되었다. 연맹은 이 같은 종횡적 연결구조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호응하는 활동망을 조직했다.⁵⁰⁾

46)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584~585쪽.

47) 「會寧社會의 重鎮 岩村長市氏畧歷」, 『동아일보』, 1939년 12월 2일.

48) 「朝鮮軍事後援團體를 統一코 聯盟結成」, 『매일신보』, 1937년 7월 25일.

49) 「朝鮮軍事後援聯盟規約」, 『동아일보』, 1937년 7월 25일.

50) 朝鮮軍事後援聯盟, 앞의 책, 3쪽.

군사후원연맹의 도지부는 1937년 7월부터 조직되었고 분회는 8월부터 조직되었다. 도지부의 결성 준비사업은 각 도청에서 진행했는데 경기군사후원연맹의 결성 준비사업은 경기도청 지방과에서 추진했다.⁵¹⁾ 7월 20일 제국군인후원회 경기도지부 외 14개 단체대표자와 경기도 부장·과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회의실에서 “경기도군사후원연맹”이 결성되었다. 연맹의 회장은 경기도지사가 맡았고 부회장은 경기도 내무부장과 한상룡(韓相龍)이 맡았다. 상담역은 고등경찰부장과 사업부장이었고 평의원은 경성부윤 외 5명이었으며 상임간사는 경기도 지방과장이 맡았다.⁵²⁾

최초로 도지부가 결성된 경기도에 이어 1937년 7월 30일에는 “경성군사후원연맹”이 결성되었다. 경성연맹의 회장은 경성부윤이 맡았고 연맹의 사무소는 경성부 총무부 내무과에 설치되었다. 경성연맹의 가맹단체는 제국군인후원회 경성위원회, 경성국방의회, 경성부방호단, 강남정총대회(江南町總代會), 경성교화단체연합회, 경성기독교청년회, 천도교, 한성의사회, 경성변호사회, 경성상공회의소, 조선주조업연합회, 조선일보사 등 70여 개에 달했다.⁵³⁾

군사후원연맹의 분회는 193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되었다. “조선군사후원연맹 경기도지부 장단분회”는 8월 8일 장단신사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장단분회의 가맹단체는 제국군인후원회위원회, 제국재향군인장단분회, 장단국방의회, 진남청년단, 군내청년단, 장단청년단, 대남청년단, 일본적십자사위원회, 대일본국방부인장단지부, 애국부인장단분회, 장단교육회 등 11개 사회단체였다.⁵⁴⁾ “충청남도군사후원연맹 부여분회”는 8월 28일에 결성되었다. 부여분회는 결성식에서 전선에서 복무하는 황군에게 격려전보를 보내기로 결정했다.⁵⁵⁾

부·군·섬에 조직된 분회 밑에는 읍·면 단위에 분구(分區)가 조직되었

51) 「軍事後援聯盟 二十九日 京畿道에서 結成式舉行豫定」, 『매일신보』, 1937년 7월 29일.

52) 「京畿軍事後援聯盟」, 『동아일보』, 1937년 7월 30일.

53) 「市内七十團體結合 京城軍事後援聯盟結成」, 『동아일보』, 1937년 7월 31일.

54) 「軍事後援聯盟 長湍分會結成式」, 『동아일보』, 1937년 8월 11일.

55) 「扶餘軍事後援聯盟結成」, 『동아일보』, 1937년 9월 2일.

다. 황해도 재령군 북물면에서는 1937년 8월 24일 면내 유지와 각 단체가 면 회의실에 모여 “군사후원연맹 재령분회 북물분구”를 결성했다. 북물분구는 분구장(分區長) 1명, 부장(副長) 2명, 평의원 12명을 각각 선출했고 위문금 500원을 모금했다.⁵⁶⁾ 경기도 부천군 소사면에서는 8월 14일 관민유지협의회를 개최하고 면내의 여러 단체를 망라해 “소사군사후원연맹”을 결성했다. 소사군사후원연맹에서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한편 제국군인후원회 조선본부 회원과 제국비행협회 회원도 모집했다.⁵⁷⁾

군사후원연맹의 각 도지부와 경성군사후원연맹의 결성 현황과 주요간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각 도와 경성부의 군사후원연맹 결성 현황과 주요간부⁵⁸⁾

지부명	결성시기 (결성장소)	결성과정과 가맹단체	주요간부
경기군사 후원연맹	1937. 7. 29 (도회의실)	14개 가맹단체와 도청의 3부장·15과장 등 40여 명이 모여 결성. 甘蔗도지사가 인사·규약을 심의하고 역원을 발표함. 복지에 파견되어 있는 川岸부대장에게 격려전보 발송	회장-甘蔗(도지사), 부회장-神谷(내무부장)·韓相龍, 상담역-高(경찰부장)·尹泰彬(사업부장), 평의원-佐伯(경성부윤) 외 5명, 상임간사-竹內俊平(지방과장)
평북군사 후원연맹	1937. 7. 29 (도회의실)	관민·유지 50여 명이 모여 결성	회장-美座(도지사), 부회장-關口(내무부장)·金藤(재향군인분회장)
경성군사 후원연맹	1937. 7. 30 (부민관)	67개 단체 대표자가 모인 가운데 佐伯 경성부윤의 사회로 결성. 복지에서 전투중인 川岸부대에 격려 전보를 발송하기로 결정하고 황군만세를 제창함	회장-佐伯顯(경성부윤), 부회장-松島清(경성부청 총무부장)·賀田直治(경성상공회의소 소장)·吳兢善(경성부청 사회과장), 평의원-安倍良夫(경성부청 내무과), 前田昇(경성부청 사회과), 成松綠(경성상공회의소), 伊達四雄(조선토목건축협회), 朴榮喆(조선상업은행), 金明潛, 李弘鍾 등 20명, 담당간사-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경성변전소, 간사-경성부청 의식접대계장, 총무계장, 직업알선계장, 의료구호계장, 회계계장, 설비계장, 동부출장소장, 용산출장소장, 영등포출장소장 등 15명

56) 『軍事後援聯盟 北栗分區組織』, 『동아일보』, 1937년 8월 28일.

57) 『素砂軍事後援聯盟結成』, 『동아일보』, 1937년 8월 21일.

58) 『동아일보』, 1937년 7월 30일; 8월 6·10·21·22일; 『매일신보』, 1937년 7월 31일; 8월 1·2·7·8일.

지부명	결성시기 (결성장소)	결성과정과 가맹단체	주요간부
충북군사 후원연맹	1937.7.30 (청주신사)	3,000여 읍민이 참석한 가운데 金 지사의 사회로 결성. 吉岡 내무부장의 개회사, 김지사가 인사·규약 결정(日高 경찰과장이 낭독), 역원위촉, 선언·전문결정. 조선군사령관·조선총독·香月사령관 등에 전문을 발송하기로 함. 가맹단체-애국부인회충북지부, 국방부인회충북지부, 향군청주분회, 청주국방의회, 충북연합청년단, 불교각종파연합회, 불교부인회, 明倫會연합회, 청주소방조, 은행회, 상공회, 청주同仁會, 번영회, 기자단, 春秋會, 장교단	회장-金東勳(도지사), 부회장-吉岡三浦(내무부장)·閔泳殷(도의원), 평의원-애국부인회충북지부 부지부장, 국방부인회 부지부장, 향군청주분회 회장, 청주국방의회 회장, 충북연합청년단 부단장, 불교각종파연합회 대표, 청주同仁會장, 불교부인회장, 명륜회연합회장, 청주소방조 組頭, 간사-隅田田保次(지방과장)·日高勇(세무과장)·失野喜代(향군분회부회장), 상담역-道會의원, 청주 각관공서장, 은행회 대표자, 대상공회 회두, 번영회장, 기자단, 春秋會, 애국부인회청주분회 부회장, 장교단장, 청주청년단장, 李明求
전남군사 후원연맹	1937.8.2 (도회의실)	도내의 관공서 대표자 30여 명. 전남 지사의 사회로 결성	회장-新貝(도지사), 부회장-李源甫(내무부장)·玄俊鎬, 고문-吉田平次郎(광주지방법원장)·正齊藤榮治(광주세무감독국장), 평의원-小池泉 외 26명(각 관공서 대표), 간사-4명
강원군사 후원연맹	1937.8.4 (도회의실)	제국군사후원회 강원도지부 등 각 단체가 회합해 결성. 金지사가 인사·규약심의, 역원발표. 총독과 군부에 감사·격려 전보를 발송	확인 안됨
함남군사 후원연맹	1937.8.4 (도회의실)	가맹단체-도내 10개 단체	확인 안됨
황해군사 후원연맹	1937.8.17	애국기 황해호 건조 기금으로 봉산군에서 황해도군사후원연맹 회장에게 6,650원을 송금	확인 안됨
평남군사 후원연맹	1937.8.20	평남도군사후원연맹이 8월 23일 평양부 산수정에서 열리는 87명의 전사자 영령에 대한 고별식에 조위금 1,150원을 보내기로 함	확인 안됨

먼저 각 도지부의 결성과정을 살펴보자. 충남·경남·경북·전북·함북의 5개 도지부는 결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충북·전남·강원·황해·평남·평북·함남의 도지부 결성시기를 종합해 봤을 때 도지부는 1937년 7월 29일부터 결성되기 시작해 8월 4일까지 결성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부지부는 경성부만 확인되는데 7월 30일에 결성되었다. 도지부는 대부분 도청 회의실에서 결성되었고 충북군사후원연맹의 경우 청주신

사에서 결성되었다. 도지부의 결성식은 도지사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도지사가 인사와 규약을 결정하고 간부를 위촉했다. 결성식이 끝난 후에는 공통적으로 중국 화북지역에 파병된 가와기시(川岸)부대, 즉 조선군 제20사단에 격려전보를 발송했다. 경기군사후원연맹은 결성 당일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가와기시 부대장에게 격려전문을 발송했다. 전문내용은 “경기도군사후원연맹의 결성됨에 따라 이를 조선신궁 대전(大前)에 봉고(奉告)를 행하고 총후의 책(責)에 임할 것을 기(期)함. 귀 부대장병 각위(各位)의 건투를 기원함”이었다.⁵⁹⁾

도지부의 가맹단체는 중앙본부가 가맹단체로 규정한 군사원호단체·의료단체·종교단체·청년단체·방위단체·사회교화단체·부인회의 지역위원회·지부·분회로 구성되었다. 충북군사후원연맹에는 청주소방조, 은행회, 상공회, 청주동인회, 번영회, 기자단, 춘추회, 장교단이 가맹했다. 도지부의 간부를 살펴보면 회장은 모두 도지사가 맡았다. 부회장은 도청 내 무부장, 경기도회 부의장 한상룡, 재향군인회 분회장, 호남은행 두취(頭取) 현준호(玄俊鎬), 조선인 도회의원이 맡았다. 부 분회의 회장은 부윤이었고 부회장은 부청 총무부장·사회과장과 상공회의소 소장이 맡았다. 평의원은 경성부윤, 경성부청 내무과·사회과 직원, 연맹에 가입한 각 단체 대표자들이었다. 상임간사는 도청 지방과장이 맡았고 간사는 도청 지방과장·세무과장, 가맹단체 대표자가 맡았다. 부 분회 간사는 부청 의식접대계장·총무계장·직업알선계장·의료구호계장·회계계장·설비계장·출장소장이 맡았다.

그렇다면 도지부의 간부로 임명된 조선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경기군사후원연맹 부회장 한상룡(韓相龍)은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과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기업인이다. 그는 연맹 창설 이전에 경성군사후원회 평의원·간사, 일본적십자사 조선총본부 협찬위원, 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회 평의원, 경성국방의회 이사, 제국재향군인회 경서지부 종로분회 고문, 제국

59) 「京畿軍事後援聯盟 道內十四團體의 呼應提携로 二十九日 結成式盛大」, 『매일신보』, 1937년 7월 30일.

비행협회 경성지부 이사, 경성교회단체연합회 고문,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고문, 해군협회 조선본부 창립위원을 역임했다. 연맹 창설 당시에는 경기도 회 부의장, 조선실업구락부 회장, 조선국방의회연합회 감사,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 고문, 관동군사령부 사무촉탁(관동군 참모부장의 추천) 등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 이용경(李龍卿)도 1921년부터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한상룡은 1937년 7월에 경성군사후원연맹의 고문으로도 위촉되었다.⁶⁰⁾

충북군사후원연맹 부회장 민영은(閔泳殷)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청주 지역의 관료이자 기업인이다. 그는 연맹 창설 이전에 청주군수, 충청흥업주식회사 사장, 충북도회 부의장, 충북도농회 부의장, 충북국방의회연합회 부회장, 조선신궁봉찬회 고문을 역임한 인물이다. 연맹 창설 당시에는 충북도회 의원과 충북명륜회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⁶¹⁾ 전남연맹 부회장 현준호는 아버지 현기봉(玄基奉)과 함께 대를 이어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광주 지역의 기업인이다. 그는 연맹 창설 이전에 호남은행 두취, 전남수산회 부회장, 국방의회 전남연합회 부회장, 조선사회사업협회 평의원을 역임했다. 연맹 창설 당시에는 사상범을 담당하는 광주보호관찰심사회의 위원, 동아일보·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을 맡고 있었다.⁶²⁾

조선인들은 지방지부에서 모두 부회장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귀족원 의원이나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친일귀족이었다. 또한 연맹 창설 이전에 군인후원회, 재향군인회, 해군협회, 제국비행협회, 교회단체연합회, 사회사업협회국방의회, 애국부인회, 일본적십자사, 조선신궁봉찬회 등 조선에 설립된 국방단체와 관련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또한 이들은 군수, 도회 부의원, 도농회 부의장, 은행 두취, 회사 사장 등 정계와 재계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조선인 간부들은 연맹 창설 당시에는 도회, 국방의회, 국방비행기헌납회, 명륜회연합회, 실업구락부 회장, 보호관찰심사회의, 언론

60)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3권, 민족문제연구소, 2012, 848~854쪽.

6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1권, 민족문제연구소, 2012, 829~830쪽.

62)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3권, 930~931쪽.

· 기업 등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한상룡은 관동군사령부 촉탁과 고문으로 활동한 군국주의적 인사였다.

군사후원연맹은 1939년 3월까지 각 도에 13개 지부와 각 부·군·섬에 225개의 분회를 결성했다.⁶³⁾ 또한 군사후원연맹의 중앙본부와 지방지부가 가맹한 단체는 1938년 1월 2일 현재 2,500여 개에 달했다. 조선총독부가 이처럼 많은 단체를 가맹시킨 이유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연맹 회장은 1938년 1월 신년사에서 “연맹에 가맹한 단체는 이천오백여에 급(及)하여 거의 전 반도민중의 대반(大半)을 망라한 일대단결로서 내선일체 열렬한 애국적성(赤誠)을 피력하여 총후의 호(護)를 고(固)케”했다면서 내선일체의 선두에 설 것임을 밝혔다.⁶⁴⁾

그런데 군사후원연맹의 지방지부와 분회의 부서체계는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부서체계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시점은 1938년 6월이다. 연맹은 ‘기존의 일시적 연맹조직기구를 항구화시켜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반도총후시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체 기구를 일대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군사후원연맹의 조직·기구체계는 다른 아닌 총독부 내무국이 연구·입안했다. 연맹은 6월 24일 도·부·군·섬과 각 군사후원연맹의 기구를 서무부, 부조부, 보건부, 직업부, 금융부 등 5부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서무부는 황군원호사상의 보급철저, 송영접대(送迎接待), 위문격려, 조문(弔問), 일반상담, 그외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했다. 부조부는 요부조자(要扶助者)조사, 생활부조, 의료·조산(助産)·생업 보조 및 그 보급, 자제육영조성(子弟育英助成), 은급부조비(恩給扶助費) 등의 일시 입체(立替)를 담당했다. 보건부는 진료와 조산을 맡았고 직업부는 직업소개, 직업보도(輔導)를 담당했다. 금융부는 자금융통, 채권부채의 조정을 맡았다.⁶⁵⁾

군사후원연맹의 지방지부는 이중적 조직계통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지방지부는 행정구역별로 하부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지부에는 부·군

63) 朝鮮軍事後援聯盟, 앞의 책, 3쪽.

64) 「躍進朝鮮의 重要性」, 『동아일보』, 1938년 1월 3일.

65) 「軍事聯盟을 擴充 各聯盟에 五部門設置」, 『동아일보』, 1938년 6월 25일.

· 섬 분회가, 분회에는 읍·면·동 분구가 소속되어 있었다. 둘째, 지방지부는 동시에 행정구역별로 조직된 사회단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충북군사후원연맹의 경우 애국부인회충북지부, 국방부인회충북지부, 제국제향군인회청주분회, 청주국방의회, 충북연합청년단, 불교각종파연합회, 명륜회연합회를 산하에 두고 있었다. 또한 강원군사후원연맹 양구분회는 제국군인후원회양구위원부, 일본적십자사양구위원부, 사회사업협회양구분회, 애국부인회양구분회, 양구국방부인회, 양구국방의회, 관동명총회양구지부, 조선경찰협회양구지방위원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군사후원연맹의 조직적 특징은 지방지부가 중앙본부와 종적 연결망을 갖추고 동시에 지역 내의 각종 사회단체들과 횡적 연결망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중층적 조직구성은 기존의 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회나 제국제향군인회 조선지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이었다. 제국군인후원회와 제국제향군인회는 각 행정단위별로 조직된 지부·분회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각 지방마다 횡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군사원호단체를 군사후원연맹에 종적으로 묶어 위계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 같은 군사후원연맹의 위계적이고 중층적인 조직계통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다. 중앙본부에서 지방지부로 연결되는 종적 조직계통은 연맹의 정책과 사업을 전달하고 연맹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달리 지방지부와 지역 가맹단체로 연결되는 횡적 조직계통은 연맹의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제점은 지방지부에 소속된 가맹단체들에는 본래 소속된 상부조직이 있었고 이 상부조직에서 하달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가령 1937년 7월 평안북도에서 수해가 발생하자 조선총독부는 수해 의연금(義捐金)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금업무는 군사후원연맹 가맹단체인 조선사회사업협회에 맡겨졌다. 또한 1938년 5월 조선사회사업협회는 아동애호 관념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제12회 아동애호주간을 설정했다. 협회는 각 도지부에 우량아동심사회를 개최해 우량아동을 선발하고 아동애호마크를 판매해 아동애호자금을 충당하라고 지시했다.⁶⁶⁾

조선총독부가 군사후원연맹의 조직을 위계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한 첫 번째 이유는 조선인을 총력전체제에 결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총력전체제 아래에서 조선인들은 나이·성별·직업·종교에 따라 내선일체단체·국방단체·부인단체·청년단체·종교단체 등에 망라되었다. 총독부는 이 단체들을 군사후원연맹 지방지부에 가맹시켜 횡적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군사후원연맹의 조직계통에 연결해서 종적 동원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조선에는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위계적이고 중층적인 동원체제가 구축되었다.

총독부가 군사후원연맹을 위계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한 두 번째 이유는 총력전체제 아래에서 조선인들의 반일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가는 총력전체제 하에서 전쟁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을 무장시키고 동원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민의 무장과 국민의 동원은 정치적 상황·조건에 따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적 위험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동원이 곧 기존 권력체제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그것이 파벌투쟁과 결합해 권력투쟁으로 확대될 경우, 국민을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전략 결심과정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⁶⁷⁾

즉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동원과 통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다. 총독부가 조선인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단체가 바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과 조선방공협회(朝鮮防共協會)였다. 사상보국연맹은 조선이 총력전체제로 돌입한 1938년 7월 24일에 결성되었다. 사상보국연맹의 결성목적은 바로 '내선일체의 강화, 반국가적 사상의 격멸, 애국적 총후(銃後)활동의 강화'였다. 또한 총독부 경무국은 총력전체제 하에서 무력전(武力戰)과 함께 사상전(思想戰)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8월 15일 조선방공협회를 조직했다. 이 단체

66) 「平北水害百五十萬圓 農作物五萬圓土木百廿萬圓 一般의義捐을 要望」, 『매일신보』, 1937년 8월 18일; 「時局下의 兒童週間 愛護를 徹底히 強調」, 『매일신보』, 1938년 5월 4일.

67) 김태현,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 대한 재인식 - 전쟁의 존재론적 해석과 '국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軍史』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102쪽.

의 결성목적은 공산주의 등 반국가사상을 차단하고 조선인에게 일본정신을 복돋아 ‘사상국방(思想國防)’을 달성하는 것이었다.⁶⁸⁾

4.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조선군사후원연맹의 해체

군사후원연맹의 조직구성에서 결정적 변화가 나타난 시점은 1938년 7월이다. 군사후원연맹은 1938년에 들어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장기전에 대응할 조선민중의 충후진영”을 강화하기 위해 연맹의 집행부서를 개편하고 기구를 정비했다. 연맹은 제1선에서 군사원호활동을 전개하는 지방지부에 서무부·군사부조부·직업부·보건부·금융부를 신설했다. 연맹의 장기전 대응계획에 따라 각 지방지부의 집행부서도 동일하게 개편되었다. 예를 들어 경북군사후원연맹은 9월부터 대구부와 7개 군 분회에 서무부·부조부·직업부·보건부·금융부를 신설했다.⁶⁹⁾

그리고 군사후원연맹은 장기전에 대응하기 위해 7월 2일 충후시설을 확충하고 군사원호활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1938년도 국고예산 8,000만 원으로 군사부조, 상이군인 요양과 직업보도(輔導), 군사원호상당소 설치, 군인유자녀의 육영, 국민 감사운동에 착수했다. 또한 그밖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맹에서 자체적으로 기부금 80만 원을 모금하고 국고보조금이나 동경씨름대회를 통해 수익금 40만 원을 창출해서 총 120만 원의 사업예산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군사후원연맹은 ‘장기전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사업내용은 군사원호사상의 보급, 황군 숭영·접대, 유가족 위안·경조, 출정군인 위문, 전사자 조위금, 군인부조사업, 상이군인 요양비·직업보도, 군인유자녀의 육영비, 출정군인 보건위생비, 연맹원호부문위원회, 유가족의 수용시설, 제대장병의 직업보도 등이었다.⁷⁰⁾

68) 「全朝鮮轉向者參集 時局對應思想報國聯盟을結成」, 『동아일보』, 1938년 7월 25일; 「武力戰과 併行 思想戰이必要」, 『동아일보』, 1938년 8월 31일.

69) 「長期戰에對應코저 軍事聯盟을擴充」, 『동아일보』, 1938년 7월 3일; 「慶北聯盟內에 部門을設置」, 『동아일보』, 1938년 9월 1일.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군사후원연맹은 193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경남 창원군 구산면에 상이군인요양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1941년까지 수백명의 상이군인을 수용할 수 있는 조선 최대의 요양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⁷¹⁾

한편 1938년 7월 1일 경성 부민관에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정동연맹)”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정동연맹의 명예총재는 조선군사후원연맹 회장인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정무총감이었고 이사장은 총독부 학무국장인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가 맡았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은 정동연맹의 하부단체로 가입했다.⁷²⁾ 이후부터 군사후원연맹은 정동연맹의 가맹단체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후원연맹의 활동력은 정동연맹에 가입한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그 이유는 군사후원연맹에 자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성군사후원연맹의 경우 1939년도 9월에 이미 해당년도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제2회 사업자금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⁷³⁾ 그해 10월에 일왕이 경성군사후원연맹에 기금으로 1만 원을 하사했지만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⁷⁴⁾

정동연맹은 일본이 조선민중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황국신민화운동’을 추진하고 물적·인적 전시동원정책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정동연맹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지도계통은 총독 → 정무총감 → 총동원위원회 → 간사회 → 관방문서과로 하달되었다. 연맹의 조직망은 총독 → 조선연맹 → 도연맹 → 부·군·도연맹 → 읍·면연맹 → 정·동·리·부락연맹 → 애국반 → 개인(호)로 확립되었다. 정동연맹은 애국반을 매개로 호별 장악력을 높였으며, 이로써 총독부의 지시와 명령이 호단위까지 하달되어 인적·물적 전시동원정책을 말단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⁷⁵⁾

70) 「長期戰에對應코저 軍事聯盟을擴充」, 『동아일보』, 1938년 7월 3일.

71) 「昌原郡龜山面에 傷痍軍人療養所建設」, 『동아일보』, 1940년 1월 28일.

72) 「今日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創立盛大」, 『동아일보』, 1938년 7월 2일.

73) 「京城軍事聯盟 事業資金募集」, 『동아일보』, 1939년 9월 14일.

74) 「京城軍事後援聯盟에 一千圓을御下賜」, 『동아일보』, 1939년 10월 11일.

또한 정동연맹과 함께 군사후원연맹의 조직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은사재단 군인원호회(恩賜財團 軍人援護會)”이다. 1938년 10월 3일 일왕은 군인원호에 관한 칙어와 함께 내탕금을 하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민간군사원호단체의 대동맥이 되는 강력한 은사재단을 설립하여 각종원호단체를 이에 합류시켜 총후원호의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1월 5일 군인원호회가 설립되었다. 군인원호회가 설립되기 직전인 11월 1일 제국군인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후원회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은사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12월 1일 제국군인후원회가 군인원호회에 합병되었다. 제국군인후원회 조선본부와 각 도 지부는 본부의 결정에 따라 12월 1일부로 해산했으며, 군인원호회 조선본부와 각 도 지부에 각각 합병하고 잔여재산과 일체를 기부했다.⁷⁶⁾ 군인원호회의 총재는 왕족이자 육군 대장인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朝香宮 鳩彦)가 맡았고 육군 대장 나라 다케지(奈良武次)가 회장을 맡았으며 육군 · 해군 중장 각 1명과 귀족원 의원 2명이 부회장을 맡았다.⁷⁷⁾

은사재단 군인원호회의 설립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기존의 군인원호단체를 군인원호회에 통합시킴으로써 이 단체를 “조선에 있는 군인원호의 중추기관”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군인원호회는 12월 1일자로 조선본부를 설립함과 동시에 각 도에 지부를 설치했다.⁷⁸⁾ 제국군인후원회 지부의 해산과 군인원호회 지부의 신설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제국군인후원회 충북지부는 1938년 12월 1일부로 해산했는데 같은 날 군인원호회 충북지부가 신설되었다. 제국군인후원회 충북지부의 재산은 모두 군인원호회 충북지부로 인계되었다.⁷⁹⁾

또한 군인원호회가 신설되자 이와 동시에 각 도에 있던 군사후원연맹 지

75) 김영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실시와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264쪽.

76) 「恩賜財團援護會 다른軍人後援의團體는全部 今日부터合流게 되어」, 『동아일보』, 1938년 12월 2일.

77) 「軍人援護會의 會長副會長」, 『동아일보』, 1938년 11월 10일.

78) 「大陸루트朝鮮의 重要性加重」, 『동아일보』, 1939년 1월 3일.

79) 「恩賜財團軍人援護會 忠北支部를 設置 軍人後援支部는 解體」, 『매일신보』, 1938년 11월 27일.

부는 조직을 해산할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중앙군사후원연맹’은 1938년 12월 1일자로 해산하고 같은 날 군인원호회 조선본부의 지도에 따라 군인원호회 경기도지부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경기군사후원연맹의 잔부 처리와 모든 재산은 군인원호회 경기도지부가 인수하기로 했다.⁸⁰⁾ 또한 평남군사후원연맹도 12월 1일 조직 전체를 해산했고 새로 군인원호회 평남지부가 조직되었다. 평남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지부 간부를 결정한 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었다.⁸¹⁾ 그리고 1938년부터 조선인 특별지원병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미 해체 중이던 군사후원연맹의 조직과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군사후원연맹은 당초 계획대로 해산되지 않았고 그 후에도 각 지부별로 조금씩 활동을 이어나갔다. 경기군사후원연맹은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7개월이 지난 1940년 7월에 중일전쟁 기념일에 편찬한 『충혼(忠魂)』의 속편을 발간했고, 7월 12일 경기도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위령제에서 이를 유족과 내빈에게 증정할 계획이었다.⁸²⁾ 도지부뿐만 아니라 부·군·섬의 분회도 해산되지 않았다. 경성군사후원연맹은 1940년 5월 28일 해군 기념일을 맞이해 부민관에서 해군 대좌의 강연을 실시하고 영화 「해군작전 기록」과 「황포강」을 상영했다.⁸³⁾ 게다가 조직해산 결정 이후 군사후원연맹과 군인원호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1939년 10월 9일 은사재단 군인원호회와 경성군사후원연맹은 경성부청에서 함께 전사자가족·출정가족 표창식과 유족기장 전달식을 거행했다.⁸⁴⁾

조선총독부가 군사후원연맹을 즉시 통합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후원연맹은 조선에만 조직된 군사후원단체였다. 그리고 1937년 7월 24일에 창립한 이래 전국적인 지방조직을 구축했고, 이미 1년 5개월 동안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군사후원사업을 전개해왔다.

80) 「恩賜財團軍人援護會 京畿道支部設置」, 『매일신보』, 1938년 11월 26일.

81) 「軍人援護會 平南支部開設 十二月一日府로」, 『매일신보』, 1938년 12월 5일.

82) 「“忠魂” 續發行」, 『동아일보』, 1940년 7월 9일.

83) 「赫赫한偉業의海軍記念日 海國의精神을昂揚」, 『동아일보』, 1940년 5월 28일.

84) 「榮譽의 十四家族 戰歿將士, 出征遺族府에서 오늘 表彰式 舉行」, 『매일신보』, 1939년 10월 10일.

이에 비해 은사재단 군인원호회는 1938년 11월 5일에 일본 후생성에서 설립허가를 받고 군인원호활동을 개시한 신생조직이었다.⁸⁵⁾ 조선총독부는 은사재단 군인원호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군사후원연맹을 존치시킨 이유에 대해 ‘조선은 특수사정과 사업 자체의 범위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⁸⁶⁾ 조선의 특수사정이란 내선일체를 확립하기 위해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한 군사후원연맹을 일본의 군사원호체계에 맞춰 통합하는 과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후원연맹은 1941년에 들어서 두 단체의 사업내용이 동일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리고 일본의 군인원호회 중앙본부와 협의해 조직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군사후원연맹은 1941년 7월 31일부로 해산했고 8월 1일 ‘일본 군인원호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군인원호회 조선본부로 통합되었다. 연맹의 모든 재산과 사업은 군인원호회로 인계되었다. 이후부터 조선의 군사후원사업은 군인원호회 조선본부가 주관했다. 군인원호회의 본부장은 정무총감이 맡았고, 각 도의 지부장은 도지사가 맡았으며, 부·군·섬의 분회장은 부윤·군수·도사(島司)가 맡았다. 군인원호회의 주요사업은 생업원호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생활원호에 관한 사항, 육영(育英)에 관한 사항, 위적(慰藉)에 관한 사항, 신상상담(身上相談)에 관한 사항, 총후후원사상(銃後後援思想)의 보급에 관한 사항, 원호사업의 조성(助成)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本會)의 목적 달성에 필요 있는 사항 등이었다.⁸⁷⁾ 결국 군인원호회 조선본부가 군사후원연맹의 원호사업을 모두 인수했음을 알 수 있다.

1941년 7월 31일에 군사후원연맹 중앙본부가 해산되자 군사후원연맹의 각 지부와 분회도 해산하고 군인원호회로 합병되었다. 함경북도군사후원연맹은 1940년 7월 31일부로 본부의 방침에 따라 조직을 해산하고 재산과

85) 「恩賜財團 軍人援護會 設立許可指令」, 『동아일보』, 1938년 11월 6일.

86) 「軍人援護事業의再出發 今日, 朝鮮軍事後援聯盟과 軍人援護會合併」, 『매일신보』, 1941년 8월 1일.

87) 「軍人援護事業의再出發 今日, 朝鮮軍事後援聯盟과 軍人援護會合併」, 『매일신보』, 1941년 8월 1일.

전체 사업을 ‘은사재단 군인원호회 함북도지부’에 인계했다.⁸⁸⁾ 강원군사후원연맹도 7월 31일 조직을 해산함과 동시에 모든 재산과 사업을 군인원호회에 인계했다.⁸⁹⁾ 이처럼 군사후원연맹 중앙본부가 공식적으로 해산됨에 따라 지방조직들도 뒤이어 군인원호회의 지방조직에 통합되었다.

5. 맺음말

조선군사후원연맹은 1937년 7월 24일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군사원호 활동에 동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설립한 군사원호단체였다. 연맹의 핵심 사업은 일본군 원호사상의 보급과 군인·유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이었다. 조선에는 이미 1911년에 설립된 제국재향군인회 조선지부와 1916년에 설립된 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회가 전몰군인 위령사업과 군인 및 그 가족을 후원하는 원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2개 단체는 군사후원연맹이 신설되자 모두 연맹의 하부단체로 가입했다. 제국군인후원회와 제국재향군인회가 군사후원연맹으로 통합됨에 따라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에서 전개된 군사원호활동의 경험이 군사후원연맹으로 계승되었다. 군사후원연맹은 조선총독부 내무국이 운영하고 조선군사령부가 협조하는 관군(官軍) 합동단체였으며 조선총독부의 중앙·지방 행정계통에 따라 운영되었다.

군사후원연맹은 설립 직후부터 각 도에 지부를 결성하고 부·군·섬에 분회를 조직함으로써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1937년 7월부터 1939년 3월까지 각 도에 13개 지부와 각 부·군·섬에 225개 분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군사후원연맹은 각종 사회단체를 하부단체로 가맹시켰는데, 1938년 1월 2일 당시 중앙본부와 지방지부에 가맹한 사회단체는 2,500여 개에 달했다. 군사후원연맹의 조직적 특징은 지방지부가 중앙본부와 종적 연결망을 갖춤과 동시에 지역 내의 각종 사회단체와 횡적 연결망을

88) 「軍事後援聯盟 發展의으로 解消」, 『매일신보』, 1941년 8월 8일.

89) 「軍人援護事業의一元化 軍事後援聯盟을解體」, 『매일신보』, 1941년 8월 2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군사후원연맹 회장 오노 로쿠이치로 정무총감 등의 간부들은 당시 조선에서 각종 사회단체의 간부를 겸임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가 군사후원연맹의 조직을 위계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한 것은 조선인을 총력전체제에 결박시킴과 동시에 총력전체제 하에서 조선인들의 반일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1938년 7월부터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일제는 한반도를 장기전에 대응할 수 있는 후방기지로 만들기 시작했다. 일제는 1938년 7월 1일 총동원체제의 중심기관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창립했으며, 12월 1일은 사재단 군인원호회 조선지부를 설립해 조선에서 군사원호활동의 중추기관으로 삼았다. 조선총독부는 군인원호회가 설립되자 군사후원연맹을 여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했지만, 전쟁의 후방기지인 한반도의 특수성과 군사원호활동을 전담해온 연맹의 사업성격을 고려해 즉시 통합하지 않았다. 이후 총독부는 두 단체의 사업내용이 동일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리고 1941년 7월 31일 군사후원연맹을 군인원호회 조선본부로 통합했다. 1937년 7월부터 1941년 7월까지 4년 동안 활동한 군사후원연맹은 총동원체제 하에서 조선인을 동원·통제할 수 있는 체계의 일면을 구축함으로써 일제 말기 군사원호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글은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설립과정·조직·간부를 분석했지만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지방지부의 실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매일신보』

『軍事扶助法施行細則左ノ通定ム』, 『조선총독부관보』(제3191호), 1937.7.28.

朝鮮軍事後援聯盟, 『朝鮮軍事後援聯盟事業要覽』, 谷岡商店印刷所, 1939.4.15.

山之内靖, ヱィクター コシュマン, 成田龍一 共編, 『總力戰と現代化』, 柏書房, 1995.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_____, 『친일인명사전』1, 민족문제연구소, 2012.

_____, 『친일인명사전』3, 민족문제연구소, 2012.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 저, 서영식 역, 『日本軍隊史』上, 제이앤씨, 2013.

김영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실시와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1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김태현,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에 대한 재인식-전쟁의 존재론적 해석과 ‘국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軍史』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우치다 준, 「총력전시기 재조선 일본인의 ‘내선일체’정책에 대한 협력」, 『아세아연구』51(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이정하, 「미하일 프룬제의 군사사상과 총력전 구상」, 『서양사연구』27, 한국서양사연구회, 2001.

이형식, 「朝鮮憲兵司令官 立花小一郎과 ‘무단통치」」, 『민족문화연구』5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Establishment of the Joseon Military Support Federation and Military Support Syste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Mobilization System, 1937~1941

Kim, Seon-ho*

The Joseon Military Support Federation(JMSF) was a private organization independently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n July 24, 1937 to mobilize Koreans for military support activities. The foundation funds for the Federation were provided by the Japanese royal family, and the Federation's core business was the dissemination of Japanese military support ideology and support for soldiers and bereaved families. The JMSF was an organization oper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cooperated with the Japanese Military Command, and was operated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JMSF established branches and branches in each region and established its own organizational system. As a result, from July 1937 to March 1939, 13 branches in each province and 225 branches in each district, county, and island were formed. In addition, the JMSF allowed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to join as sub-organizations, and as of January 2, 1938, the number of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central headquarters and local branches reached about 2,500.

As the Chinese-Japanese War became prolonged starting in July 1938,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apanese imperialism began to tur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rear base capable of responding to a long-term war.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Joseon branch of the Military Aid Association on December 1, 1938 and made it the central organization for military aid activities. Afterwards, the JMSF was active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was integrated into the Joseon branch of the Military Aid Association on July 31, 1941.

Key words : Japan's Imperial Soldier Support Association, Japan's Imperial Veterans Association, Joseon branch of the Military Aid Association, Korean Federation for Total Mobilization of National Spirit, Chinese-Japanese War, Japanese Military Headquarters